

[민준호 공무원 사회]
2015년 서울시 기출문제
문제와 해설

1. 다음 표는 갑국의 법률 발의안 가결률과 여당 의석률을 시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가결률은 소수점 이하생략, (가결수/발의수)×100=가결률)

항목 시기(국회)	정부 제출 발의안		국회 제출 발의안		여당 의석률(%)
	발의수	가결률(%)	발의수	가결률(%)	
19대	13,985	42	9,542	46	44
20대	16,542	39	10,867	51	46
21대	18,252	58	12,479	54	52

<보기>

- ㉠ 여당의 의석률이 높아질수록 정부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이 높아진다.
 ㉡ 20대에서는 국회 제출 발의안 가결수보다 정부 제출 발의안 가결수가 많다.
 ㉢ 갑국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로 총리의 의회해산권을 인정할 것이다.
 ㉣ 여대야소인 경우가 여소야대인 경우보다 정부 제출 발의안에 대한 가결률이 더 높다.

① ㉠, ㉡ ② ㉠, ㉡, ㉣ ③ ㉡, ㉢, ㉣ ④ ㉡, ㉣

1. [정답] ④

[출제단원] II.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정부형태 자료 분석 문제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면 여당 의석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제출 발의안 발의수와 국회 제출 발의안 발의수는 각각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은 20대에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회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ㄱ. (X) 20대 국회의 경우 여당 의석률이 상승(44%→46%)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은 하락(42%→39%)했습니다.

항목 시기(국회)	정부 제출 발의안		국회 제출 발의안		여당 의석률(%)
	발의수	가결률(%)	발의수	가결률(%)	
19대	13,985	42	9,542	46	44
20대	16,542	39(↓)	10,867	51	46(↑)

ㄴ. (O) 20대 국회의 경우 비록 국회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이 정부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보다 높지만 국회 제출 발의안의 절대적인 발의수가 정부 제출 발의안의 발의수보다 적어서 국회 제출 발의안 “가결수(10,867×51/100≒5,542)”보다 정부 제출 발의안 “가결수(16,542×39/100≒6,451)”가 많습니다.

ㄷ. (X)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니까 마치 옳은 선택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선택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대통령제이지만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해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의 가능 유무에 따라 의원내각제의 정부 형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정부 형태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행정부의 구성이 의회의 다수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의원 내각제이고 의회의 구성과 무관하게 국민들에 의해 따로 선출되면 대통령제입니다. 제시된 자료에서 19대, 20대 여당 의석률을 살펴보면 50%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당은 행정부 수반이 소속한 집권당을 의미하는데, ‘의원내각제’에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여당이 되어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석률이

50%미만임에도 여당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갑국’의 정부형태가 ‘대통령제’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의원내각제’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을 경우 다른 정당과의 연합을 통하여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이러한 두 정당이 공동여당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두 정당(=공동여당)의 의석률의 합은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ㄹ. (O) 여당 의석률이 과반을 넘어선 경우가 여대야소로 21대 국회에 해당합니다. 여당 의석률이 과반을 넘지 못한 경우가 여소야대로 19, 20대 국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21대 정부 제출 발의안에 대한 가결률이 58%이고 19, 20대의 경우 각각 42%, 39%입니다. 이를 통해 여대 야소인 경우가 여소야대인 경우보다 정부 제출 발의안에 대한 가결률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서초구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소수 대표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등 대부분의 선거는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③ 서울시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1인 1표제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다.
 ④ 모든 선거의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는 동일하게 4년이다.

2. [정답] ①

[출제단원] II.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핵심요약정리] 대표 선출 방식

선출 대상	투표 행사	구분	선출 방식	임기	제한
대통령	1인 1표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	5년	단임
국회의원	1인 2표	지역구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	4년	
		비례대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광역 자치단체장	1인 1표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	4년	3기
기초 자치단체장	1인 1표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	4년	3기
광역 의회	1인 2표	지역구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	4년	
		비례대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기획 의회	1인 2표	지역구	중선거구제+소수 대표제	4년	
		비례대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시·도 교육감	1인 1표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	4년	3기

① (O) 서초구는 ‘특별시의 구’로 기초 지방 자치 단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초구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기초 지방 의회의 선거로 선거구제도로는 중선거구제, 대표 선출 방식으로는 소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② (X)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 비례대표, 광역 의회와 기초 의회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로, 기초 지방 의회의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선출합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 국회의원 지역구, 광역 자치단체장, 기초 자치단체장, 광역 지방의회 선거는 모두 소선거구제와 다수 대표제 방식으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③ (X) 서울시는 특별시로 광역 자치 단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지방의회 선거는 광역 의회 선거로 1인 2표제이며 지역구는 소선거구제이고 비례 대표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④ (X)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단임제입니다.

3. 다음은 국제연합의 주요기구이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 안전보장이사회, B : 국제사법재판소

- ① A의 상임이사국에게 거부권이 존재하는 것은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 ② A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연합의 주요기구로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이 존재한다.
- ③ B의 판결 내용을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 ④ B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 가맹국만을 대상으로 하며 비가맹국은 재판의 당사국이 될 수 없다.

3. [정답] ④

[출제단원] VI.국제 정치와 법

[출제영역] 국제연합의 주요기구(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5개 상임 이사국과 임기 2년의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UN)의 사법기관입니다. 국가 간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리므로 국가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최종적이며 상소할 수 없습니다. 한국도 1991년 9월 17일에 국제연합에 가입함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① (O)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의사 결정은 절차사항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의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9개 이상의 이사국이 찬성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도 5개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만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관련 안건이 부결됩니다. 이를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중 ‘국가 간의 힘의 우위’를 인정하는 현실주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② (O)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성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③ (O) 일방 당사국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타방 당사국은 안보리에 제소할 수 있으며 안보리는 판결의 이행 권고 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④ (X) ‘국제 연합(UN)’의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는 조건으로 ICJ규정의 당사국이 되어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간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리므로 국가만이 법원에 제소되는 사안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행위에 ㉠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 책임능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재산적, 정신적으로 배상을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 다른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보기>

- ㉠: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 민법상 책임능력은 의사능력을 책임 측면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의사능력보다 약간 높은 정신능력으로 판단하고 있다.
- ㉢: 민법에서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 특수 불법행위의 유형으로 공동 불법행위 책임, 고용관계의 경우 사용자의 책임,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등이 해당한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4. [정답] ②

[출제단원] IV.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특수 불법행위

ㄱ. (O) 민사상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피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과의 인과관계, 위법성, 책임성,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예외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는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업자의 책임,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의 책임, 국가의 영조물 설치 및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음). 특징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형사상 범죄를 다룰 때와 차이가 납니다. 형사상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는 경우에 처벌하고, 과실범의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ㄴ. (O) 민법상 책임능력은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즉, 의사능력과 마찬가지로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책임능력은 불법행위 영역에서의 의사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능력의 경우 판례에 의하면 보통 만7세 내지 만10세 정도의 어린이의 정신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반하여, 책임능력의 경우 만12세 정도를 경계점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민사상 책임능력이 의사능력보다는 약간 높은 정신능력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ㄷ. (O) 민법에서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이외의 손해(대표적으로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은 금전 배상이 원칙입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ㄹ. (X) 공동 불법행위, 사용자 배상 책임은 특수한 불법행위가 맞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12세 미만의 경우 책임무능력자로 인정해서 그 감독자에게 특수한 불법행위인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2세 이상의 경우 책임 능력자로서 그 감독자가 지는 책임은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됩니다.

5. 다음은 법률상담의 내용이다. 법적 조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는 이번에 회사 사무실이 이전하면서 회사 근처에 있는 집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전세대란으로 집 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회사 근처에 적당한 집이 나와서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처음인데,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군요.

【을구】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1	저당권 설정	2015년 3월 5일 제 〇〇〇〇호	... 계약	채권 최고액 금〇〇〇원 채무자 갑 저당권자 A은행(이하 생략)

- ① 철수 : 임대차 기간은 보통 2년으로 정하며 입주와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 ② 영희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③ 지우 : 확정일자를 받아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어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④ 유경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경매가 집행되더라도 임차보증금의 일부금액에 대하여 최우선으로 지급됩니다.

5. [정답] ③
[출제단원] IV.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주택임대차보호법

① (정답가안으로는 0)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정합니다. 다만,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그러지 못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출제자는 이러한 일반론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묻기 위하여 본 선택지를 맞는 지문으로 구성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선택지는 문제에서 제시된 사실관계 하에서는 옳지 않은 지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번 선택지의 오류에 대한 근거

1.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경매목적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0.02.11. 선고 99다59306 판결).

⇒ 위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고, 그 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있더라도, 해당 주택이 경매가 되면 임차권자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차권자는 경락인(=경매를 통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된 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대항력은 '주민등록'과 '인도'라는 요건이 갖추어 지면 누구에게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가 되면, 경락인에게 임차인의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선순위저당권자가 있더라도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대항력'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해 그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대항력'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문제이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에게는 '대항력'으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으로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①번 선택지에서 '대항력'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임차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옳은 선택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3. **대항력의 일반론을 설명한 지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문제를 살펴보면 제시된 사례에 대한 법적 조언으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론 적인 내용의 정오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론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입하여 옳지 않은 법적 조언을 한 내용을 고르는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①번 선택지의 내용이 '대항력'에 대한 일반론으로는 옳은 설명일지라도 선순위저당권자가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에서는 옳지 않은 법적 조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선순위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가 되면, 임차인은 입주와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추어도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 조언이 옳은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② (O)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소액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을 제외하고는 선순위 권리자인 저당권자가 우선하므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③ (X)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을 선순위저당권자에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후순위권리자에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③번 선택지는 누구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가능하므로, 일률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선택지의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 ④ (O)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의 경우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액수가 소액이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선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최우선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액수의 임차보증금을 최우선 변제 받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참고로 2014년 이후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이 9,5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우선 변제금은 3,200만 원입니다.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 변제권과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의 차이와 공통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의미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
요건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	점유+전입신고
액수	보증금 전체	법령에서 정하는 보증금 액수
등기	필요치 않음	필요치 않음

6.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실형을 선고하면서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가, 그 기간에 다른 범행이 없으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실형을 집행하지 않는 제도이다.

㉡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 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 ① ㉠에는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감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② ㉡은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에 내려진다.

③ ㉠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며, ㉠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은 선고의 효력을 잃는다.

④ ㉡은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고 1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정답] ④

[출제단원] V.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 (가)는 집행유예로 유죄의 판결을 한 뒤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이고 (나)는 선고유예로 경미한 형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을 무탈하게 경과하면 면소(피고사건이 실제적인 소송조건을 결여하고 있어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는 판결)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① (O)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② (O) 범죄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선고 유예는 범죄 사실이 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③ (O)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며, 유예된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④ (X)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7.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최근 ㉠ 비가 내리지 않는 ㉡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 나들이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 ① ㉠의 현상은 물가치적이다.

② ㉡의 현상은 당위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③ ㉢의 현상은 개연적이고 확률적이다.

④ ㉠, ㉡과 같은 현상에 의해 ㉢의 현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7. [정답] ②

[출제단원] I.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자연현상 vs 사회·문화 현상

- 비가 내리지 않는 것(㉠)과, 날씨가 건조 한 것(㉡)은 인간이 주체가 되지 않는 자연현상이고 산불방지를 위해 나들이객이 주의하는 것(㉢)은 인간이 주체가 된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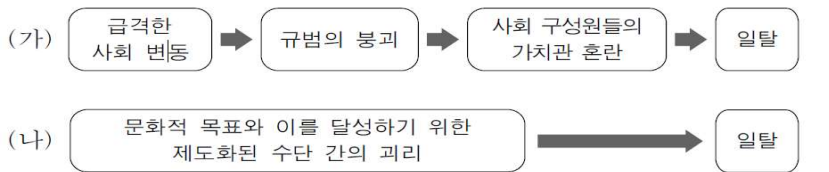
① (O) 자연현상은 인간의 가치가 개입되지 않는 물가치성을 특징으로 하고, 사회 현상은 인간의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가치함축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② (X) 자연현상은 물가치적이므로 인간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존재법칙(“있다 혹은 없다”의 문제)의 지배를 받습니다. 한편,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으로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므로 당위법칙(“마땅히 이러해야 한다 혹은 저러해야 한다”의 문제)의 지배를 받습니다.

③ (O) 사회·문화 현상도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과관계에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연성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개연성(蓋然性)’이라는 말을 풀어보면 아마도 개(蓋)와 그러할 연(然)이 합쳐져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하다’라는 뜻인데, 해석해보면 원인이 있으면 대체로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또 원인이 있으면 확실히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결과나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확률의 원리가 지배한다고도 표현합니다. 이 둘 다 인과관계와 예외가 공존하는 사회 현상의 특징이 반영된 표현인 것입니다.

④ (O) 자연현상과 사회 현상은 상호 작용을 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전염병의 창궐에 대해 인간이 방역 대책을 세우는 것은 자연 현상이 사회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8. 다음은 일탈 이론에 대한 도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가)와 (나)의 입장은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탈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② (가)는 지배집단이 정해 놓은 규범에 상충되는 행위가 일탈 행동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③ (나)는 일탈 행위자와의 접촉을 통해 사회화된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④ (가)와 달리 (나)는 일탈의 원인을 아노미로 본다.

8. [정답] ①

[출제단원] II.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아노미 이론

-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사회를 통제해왔던 전통적 규범이 붕괴되고 이로 인한 사회 혼란으로 일탈행동이 발생한다고 보는 (가)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제도적으로 허용된 수단으로는 사회구성원 다수가 추구하는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 일탈행동이 발생한다고 보는 (나)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 ① (O) 뒤르켐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일탈을 무규범 상태에서 발생하는 비교적 일시적이며 예외적인 현상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이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관의 확립(뒤르켐), 사회적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의 제공(머튼)을 통해 다시 균형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뒤르켐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사회 문제는 정상이 아니며 균형을 회복하면 다시없어지는 것으로 보는 기능론적 관점인 것입니다.
- ② (X) 지배집단이 정해 놓은 규범에 상충하는 행위가 일탈 행동이 된다는 입장은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지배집단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반발하는 주장과 행위를 금지하는 사회 규범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규범에 위반하는 행위를 일탈로 규정하고 처벌함으로써 지배집단의 이익을 보존하고 이에 대한 저항을 억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갈등론적 관점의 입장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토지라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토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득권 세력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제도를 만들어 토지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지배권을 획득한 토지를 침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드는데, 이렇게 기득권 세력의 부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저항하는 행위가 일탈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 ③ (X) 일탈 행위자와의 접촉을 통해 사회화된 일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차별적 교제이론입니다.
- ④ (X) (가)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나)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가)와 (나) 둘 다 아노미 이론의 입장에서 일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9.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우는 ㉠ 광고 홍보학과 진학을 꿈꾸었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포기하고 ㉡ 의과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광고 홍보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하고 ㉢ 광고 홍보 동아리에 가입하여 의학 공부보다는 동아리 활동에 열중했다. 결국 지우는 의학 공부를 포기하고 광고 홍보학과로 편입하여 ㉣ 광고 홍보 회사에 취직하였다.

- ① ㉠은 지우의 내집단이다.
- ② ㉡은 이익 사회이자 1차 집단이다.
- ③ ㉠과 ㉢은 지우의 준거집단이다.
- ④ ㉣은 결합의지에 따른 구분에 의하면 본질적 의지에 의해 형성된 집단이다.

9. [정답] ③

[출제단원] II.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사회 집단

- ① (X) 내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소속+소속감’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광고 홍보학과와 의 경우 지우가 실제로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집단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X) 의과대학은 선택적 의지에 따라 결합하는 이익사회입니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접촉방식은 형식적, 수단적 관계가 주로 이루어지는 2차 집단입니다.

- ③ (O) 준거 집단은 한 개인이 사고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는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사회 집단에 ‘실제로 소속’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내집단과 달리 준거 집단은 ‘실제로 소속’되는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고 홍보 동아리(㉢)처럼 실제로 속해 있는 집단 뿐 아니라, 광고 홍보학과(㉠)처럼 속해 있지 않더라도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기준이 된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준거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 ④ (X) 결합 의지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은 이익 사회와 공동 사회입니다. 이익 사회는 선택적 의지에 따라, 공동 사회는 본질적 의지에 따라 결합하는 사회 집단입니다. 광고 홍보 회사는 선택적 의지에 따라 결합하는 이익 사회로 분류됩니다.

10. 다음 표는 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평균 임금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남성과 여성의 정규직 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남성	70%	75%	80%
여성	70%	80%	75%

- ① 여성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차이는 2013년이 2012년보다 적다.
- ② 남성의 경우, 전년대비 2013년의 평균 임금상승률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높다.
- ③ 2013년 여성의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2012년에 비하여 하락하였다.
- ④ 2013년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여성이 남성보다 적다.

10. [정답] ②

[출제단원] IV.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문화 자료 분석 문제(비율과 변화율)

- ① (X) 여성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차이는 2013년이 2012년보다 더 큼니다.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정규직 여성과 비정규직 여성 간 임금의 상대적 격차는 20%에서 25%로 증가했습니다. 상대적 격차가 증가했다고 절대적 격차도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정규직 여성의 평균 임금이 증가했다고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상대적 격차 뿐 아니라 절대적 격차도 증가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세요.

구분	2012년	2013년
정규직 여성 평균 임금	100만 원	120만 원
비정규직 여성 평균 임금	80만 원	90만 원
상대적 격차	20%	25%
절대적 격차	20만 원	30만 원

2012년 정규직 여성의 평균 임금이 100만 원이라면 비정규직 여성의 평균 임금은 이것의 80%인 80만 원이 됩니다. 이들의 상대적 격차는 20%이고, 절대적 격차는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규직 여성의 임금이 2013년에 20만 원 증가해서 120만 원 됐고, 상대적 격차가 25%이면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은 90만 원입니다. 상대

적 격차 뿐 아니라 절대적 격차도 더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② (O) 정규직 남성의 평균 임금이 인상된 상황에서 정규직 남성과 비정규직 남성 간의 상대적 임금 격차가 감소했다는 것은 정규직 남성의 임금 상승률보다 비정규직 남성의 임금 상승률이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세요.

구분	2012년	2013년	임금 상승률
정규직 남성 평균 임금	100만 원	125만 원	25%
비정규직 남성 평균 임금	75만 원	100만 원	33.3%
상대적 격차	25%	20%	구분

2012년 정규직 남성 평균 임금이 100만 원이라면 비정규직 남성 평균 임금은 이보다 25% 적은 75만 원이고, 2013년 정규직 남성 평균 임금이 125만 원이라면 비정규직 남성 평균 임금은 이보다 20% 적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규직 남성 평균 임금은 25% 증가했는데, 비정규직 남성 평균 임금은 33.3%가 증가한 것입니다.

③ (X) 2012년에 20%이던 정규직 여성과 비정규직 여성간의 상대적 임금 격차는 2013년으로 넘어오면서 25%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여성과 비정규직 여성간의 상대적 평균 임금 격차가 커진 것이 곧 비정규직 여성 임금의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세요.

구분	2012년	2013년
정규직 여성 평균 임금	100만 원	120만 원
비정규직 여성 평균 임금	80만 원	90만 원
상대적 격차	20%	25%

위의 표에서 보듯이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가면서 정규직 여성과 비정규직 여성 간의 상대적 평균 임금의 격차는 커졌지만 비정규직 여성 평균 임금은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④ (X) 제시된 자료는 성별 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평균 임금 비중에 관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만을 가지고는 남성과 여성의 절대적인 평균 임금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11. 다음 표는 갑국의 세대 간 계층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부모 자녀	상층	중층	하층	합계
상층	2명	3명	5명	10명
중층	10명	25명	35명	70명
하층	3명	7명	10명	20명
합계	15명	35명	50명	100명

- ① 갑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인구가 대물림 인구보다 많다.
- ② 부모와 같은 계층인 자녀의 수는 하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 ③ 세대 간 이동은 상승 이동보다 하강 이동이 많다.
- ④ 자녀계층보다 부모계층에서 안정적인 계층구조가 나타난다.

11. [정답] ①

[출제단원] IV.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문화 자료 분석 문제(계층구조)

① (O) 갑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인구는 상승 이동 43명(3+5+35)과 하강 이동 (10+3+7) 20명을 합쳐 63명입니다. 계층이 대물림된 인구는 37명(=2+25+10)으로 세대 간 계층 이동 인구가 대물림 인구보다 많습니다.

부모 자녀	상층	중층	하층	합계
상층	2명(-)	3명(↑)	5명(↑)	10명
중층	10명(↓)	25명(-)	35명(↑)	70명
하층	3명(↓)	7명(↓)	10명(-)	20명
합계	15명	35명	50명	100명

② (X) 부모와 같은 자녀의 수는 상층은 2명, 중층은 25명, 하층은 10명으로 중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부모 자녀	상층	중층	하층	합계
상층	2명	3명	5명	10명
중층	10명	25명	35명	70명
하층	3명	7명	10명	20명
합계	15명	35명	50명	100명

③ (X) 세대 간 상승 이동은 43명(=3+5+35)이고 하강 이동은 20명(=10+3+7)으로 상승 이동이 하강 이동보다 많습니다.

부모 자녀	상층	중층	하층	합계
상층	2명(-)	3명(↑)	5명(↑)	10명
중층	10명(↓)	25명(-)	35명(↑)	70명
하층	3명(↓)	7명(↓)	10명(-)	20명
합계	15명	35명	50명	100명

④ (X) 부모계층 구성원의 숫자는 상층 15명, 중층 35명, 하층 50명입니다. 따라서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상층<중층<하층”인 피라미드형 계층구조입니다. 자녀계층 구성원의 숫자는 상층이 10명, 중층이 70명, 하층이 20명입니다. 따라서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중층>상층, 하층”인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계층에 비해 자녀계층의 계층구조가 안정적인 계층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자녀의 계층 구조 ↓
상층	2명	3명	5명	10명
중층	10명	25명	35명	70명
하층	3명	7명	10명	20명
부모의 계층 구조 →	15명	35명	50명	구분

12. 인간의 문화를 연구할 때,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아래의 표에서 문화의 이해 태도인 A~C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A, B, C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의 하나이다.)

태도	A	B	C
질문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가?	예	아니오	아니오
자기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가?	아니오	예	아니오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예	예	아니오

<보기>

㉠ A는 선진 문물의 수용에 기여할 수 있고, 자기문화의 낙후성을 개선할 수 있다.

㉡ B는 19세기 서구 열강들의 서구 중심적 가치관으로 문화적 마찰 발생가능성이 있다.

㉢ C는 타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보존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문화 이해 태도로 A관점과 C관점을 가진 사람에게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문화가 존재한다.

- ① ㉠, ㉡

② ㉠, ㉡, ㉢

③ ㉠, ㉡, ㉢, ㉤

④ ㉡, ㉢, ㉤

12. [정답] ②
[출제영역]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 ‘예’라고 답한 A는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자기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가?’에 대해 ‘예’라고 답한 B는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한 C는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ㄱ. (O) 문화 사대주의는 다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약하여 선진 문물의 수용에 기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수용된 다른 문화의 장점을 활용해 자기문화의 낙후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문화를 동경하는 나머지 자기 문화를 업신여기거나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자문화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ㄴ. (O) 자문화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19세기 말 제국주의 열강들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열강들은 사회진화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문화는 발전되고 세련된 것이라면 서구이외의 다른 문화들에 대해 미개하고 열등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자문화를 다른 사회에 강제로 이식하려고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문화와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ㄷ. (O) 문화 상대주의의 태도는 자신의 문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화의 관점에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짐으로서 문화 다양성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ㄹ. (X) 문화 사대주의는 자신의 문화는 열등하고 다른 문화는 우월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고 모든 문화는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문화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13. 표는 갑국의 경제 활동 인구에 관한 통계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인구	실업자 수
2009년	30,000명	20,000명	1,000명
2014년	35,000명	21,000명	3,000명

- * 경제 활동 참가율=(경제 활동 인구/15세 이상 인구)×100

** 고용률=(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100

① 2009년보다 2014년에 실업률이 더 낮다.

② 2009년보다 2014년에 취업자가 더 많다.

③ 2009년보다 2014년에 고용률이 더 낮다.

④ 2009년 대비 2014년 실업자 증가율이 취업자 증가율보다 낮다.

13. [정답] ③
[출제단원] IV.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고용지표의 분석
[핵심요약정리] 실업 관련 주요 개념

전체 인구			
15세 미만 인구	15세 이상 인구(노동 가능 인구)		
	비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인구	
		실업자	취업자

취업자 수는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를 뺀 값으로 구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취업자 수를 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인구	실업자 수	취업자 수
2009년	30,000명	20,000명	1,000명	19,000명
2014년	35,000명	21,000명	3,000명	18,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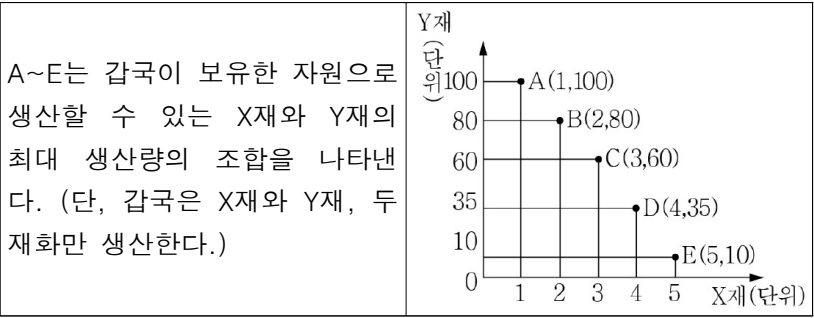
- ① (X)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 활동 인구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업률을 계산하면 2009년은 5%[(1,000/20,000)×100], 2014년은 약 14.3%[(3,000/21,000)×100]이므로 2009년에 비해 2014년의 실업률이 높습니다.

② (X) 2009년의 취업자 수는 19,000명이고 2014년은 18,000명으로 2009년에 비해 2014년에 취업자가 더 적습니다.

③ (O)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률을 계산하면 2009년은 약 63.3%[(19,000/30,000)×100], 2014년은 약 51.4%[(18,000/35,000)×100]이므로 2009년보다 2014년에 고용률이 더 낮습니다.

④ (X) 2009년 대비 2014년의 실업자 증가율은 200%[(3,000-1,000)/1,000×100]이고 취업자 증가율은 약 -5.3%[(18,000-19,000)/19,000×100]이므로 실업자 증가율이 취업자 증가율에 비해 높습니다.

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X재와 Y재 생산에 자원이 고르게 배분된 C가 A보다 효율적이다.
- ② X재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B에서 C로 이동할 때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보다 크다.
- ③ B에서 A로 이동할 때, Y재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X재 1단위이다.
- ④ Y재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C에서 B로 이동할 때가 D에서 C로 이동할 때보다 더 크다.

14. [정답] ④
[출제단원] I.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해결
[출제영역] 생산 가능 곡선의 분석

- ① (X) 생산 가능 곡선이란 한 나라가 보유한 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각 재화의 최대 생산량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A~E는 갑국이 보유한 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최대 생산량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므로 모두 생산 가능 곡선 상의 점에 해당합니다. 생산 가능 곡선 상의 모든 생산 수량 조합은 한 나라의 생산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 가능한 두 재화의 수량 조합이므로 모두 효율적인 생산 조합입니다.
- ② (X) 생산 수량 조합이 A(1,100)→B(2,80)일 경우 X재 1단위를 더 생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Y재 20단위를 포기하였으므로 X재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Y재 20단위입니다. 생산 수량 조합이 B(2,80)→C(3,60)일 경우 X재 1단위를 더 생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Y재 20단위를 포기하였으므로 X재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역시 Y재 20단위입니다. 따라서 생산 수량 조합이 A(1,100)→B(2,80)일 경우와 B(2,80)→C(3,60)일 경우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동일합니다.
- ③ (X) 생산 수량 조합이 B(2,80)→A(1,100)일 경우 Y재 20단위를 더 생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X재 1단위를 포기하였으므로 Y재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X재 1/20단위입니다.
- ④ (O) 생산 수량 조합이 D(4,35)→C(3,60)일 경우 Y재 25단위를 더 생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X재 1단위를 포기하였으므로 Y재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X재 1/25단위입니다. 생산 수량 조합이 C(3,60)→B(2,80)일 경우 Y재 20단위를 더 생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X재 1단위를 포기하였으므로 Y재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X재 1/20단위입니다. 따라서 Y재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C에서 B로 이동할 때가 D에서 C로 이동할 때보다 더 큼니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A재와 B재는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이며, A재와 C재는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이다.
- 최근 A재의 부품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 A재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작고, B재와 C재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크다.

- ① B재의 거래량은 증가한다.
- ② C재의 가격은 하락한다.
- ③ A재와 B재의 가격은 모두 상승한다.
- ④ A재의 판매수입은 감소한다.

15. [정답] ④
[출제단원] III.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연관재와 시장 균형의 변동 추론

- A재의 부품 가격 하락은 A재 시장의 공급 증가 요인입니다.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을 때 A재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A재 균형 가격이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A재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으므로 가격의 하락률에 비해 수요량의 증가율이 작아서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감소하는 매출액이 수요량 증가로 인해 증가하는 매출액에 비해 커서 A재의 판매수입은 감소합니다.
- A재와 B재는 대체 관계이므로 A재의 공급 증가로 인해 A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B재 수요는 감소합니다.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으면 B재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무관하게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여 B재의 판매수입은 감소합니다.
- A재와 C재는 보완 관계이므로 A재의 공급 증가로 인해 A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C재 수요는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으면 C재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무관하게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여 C재의 판매수입은 증가합니다.
- ① (X) B재는 수요가 감소하여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 ② (X) C재는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은 상승합니다.
- ③ (O) A재와 B재의 가격은 모두 하락합니다.
- ④ (X) A재의 판매수입은 감소합니다.

16. 다음 표는 A~D재의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1% 인상될 경우 수요량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재화	A재	B재	C재	D재
수요량 변화율(%)	-0.5	0	-1	1

- ① A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 ② B재의 판매량이 변하지 않는다.
- ③ C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 ④ D재는 판매수입이 변하지 않는다.

16. [정답] ②
[출제단원] III.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수요의 가격 탄력성

A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낮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 B는 가격 변화와 상관없이 수요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 C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기 때문에 단위 탄력적 상품입니다. D는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요법칙의 예외가 나타나는 재화입니다.

- ① (X)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하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A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으므로 A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입니다.
- ② (X)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따라서 가격 상승에 대해서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판매량은 변화가 없습니다.(정량구매)
- ③ (O) C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므로 C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단위 탄력적입니다.
- ④ (X) 판매수입은 가격과 판매량(수요량)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D재의 경우 가격이 상승했는데 수요량이 증가하므로 판매수입은 증가합니다.

17. 다음 표는 A국의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 지수는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명목 GDP	400억 달러	400억 달러	400억 달러
실질 GDP	300억 달러	400억 달러	500억 달러

* GDP 디플레이터=(명목 GDP/실질 GDP)×100

- ① 2011년의 물가 지수는 75이다.
- ② 2012년의 물가는 전년도와 같다.
- ③ 2013년의 물가는 전년도에 비해 하락했다.
- ④ 2012년과 2013년의 물가상승률은 같다.

17. [정답] ③

[출제단원] IV.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명목 GDP와 실질 GDP를 통한 물가지수의 추론

제시된 자료에 물가 지수는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구합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은 물가 상승폭(금년도 물가 지수-전년도 물가 지수)을 전년도 물가 지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연도의 물가지수와 물가상승률을 구하면 표와 같습니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명목 GDP	400억 달러	400억 달러	400억 달러
실질 GDP	300억 달러	400억 달러	500억 달러
물가 지수	133.3	100	80
물가 상승률(%)	알 수 없음	-24.8	-20

- ① (X) 2011년의 물가지수는 약 133.3[=(400/300)×100]입니다.
- ② (X) 2012년의 물가지수는 100이고 2011년의 물가 지수는 133.3이므로 2011년의 물가는 전년도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 ③ (O) 2012년의 물가 지수는 100이고 2013년의 물가 지수는 80이므로 2013년의 물가는 전년도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 ④ (X) 물가 상승률은 물가 상승폭(금년도 물가 지수-전년도 물가 지수)을 전년도 물가 지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구합니다. 2012년의 물가 상승률은 약 -24.8%[≒{(100-133)/133}×100]이고 2013년의 물가 상승률은 -20%[≒{(80-100)/100}×100]이므로 2012년과 2013년의 물가상승률은 다릅니다.

18. 다음 표는 우리나라의 국제 수지 중 경상 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에 해당하는 사례 중 옳지 않은 것은?

		외화 수취	외화 지급
경상 수지	상품 수지	㉠	
	서비스 수지	㉡	
	본원 소득 수지		㉢
	이전 소득 수지		㉣

- ① ㉠ - 국내 김 생산 업체가 일본에 김을 수출하고 대금을 받았다.
- ② ㉡ - 외국계 금융회사의 한국 금융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 ③ ㉢ - 네팔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의 가족에게 자신이 받은 급여를 송금하였다.
- ④ ㉣ - 국내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후원금을 보냈다.

18. [정답] ②

[출제단원] V.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국제수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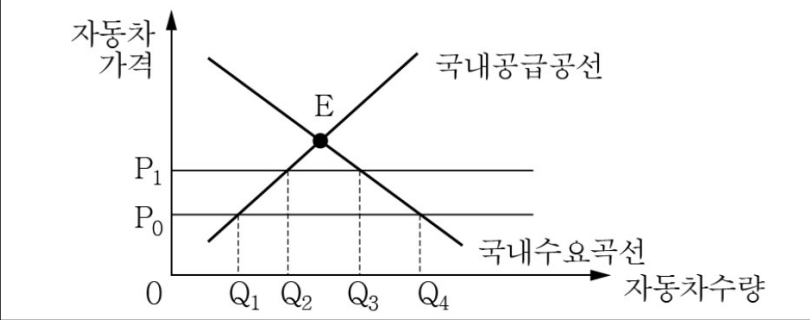
[핵심요약정리] 국제수지의 구성(최근 변화된 것을 반영함)

구분		구성 성분
경상 수지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상품 수지	상품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와 상품의 수입으로 지출한 외화의 차액으로 경상 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큼
	서비스 수지	여행, 교육(유학, 연수), 운수, 통신, 건설, 보험, 지적 재산권 사용료, 특허권, 저작권 등의 수출입
	본원 소득 수지	국내 외국인 근로자 또는 해외 내국인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차액, 대외 금융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이자, 투자 배당금 등으로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
	이전 소득 수지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무상 원조, 국제기구 출연금, 해외 유학생 및 교포에의 송금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이
자본·금융 계정	금융 계정	직접 투자, 증권 투자, 차관 도입이나 제공, 준비자산 등 민간 기업·금융 기관·정부의 자본 거래를 통해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
	자본 수지	자본 이전(자산 소유권의 무상이전, 채권자에 의한 채무면제 등), 비생산·비금융 자산(브랜드네임, 상표 등 마케팅자산과 기타 양도 가능한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의 대외 거래로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

- ① (O) 김은 상품이므로 국내 김 생산 업체가 일본에 김을 수출하고 받은 금액은 상품 수지의 외화 수취 요인입니다.
- ② (X) 외국계 금융회사가 한국 금융 시장에 진출하려면 외국의 자본을 가져와 우리나라에 금융회사(은행이나 증권회사)를 만들거나 기존의 회사를 인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경상수지 항목이 아니라 자본·금융계정 중 금융 계정에 해당합니다.
- ③ (O) 외국인의 국내 근로나 자국민의 해외 근로는 본원 소득 수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외국인이 국내 근로 이후에 본국의 가족에게 급여를 송금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본원 소득 수지의 외화 지급 요인입니다.
- ④ (O) 이전 소득 수지는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무상 원조나 해외 유학생 및 교포에의 송금으로 국내 고등학생의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것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전 소득 수지의 지급 요인입니다.

19. 다음 상황에서 관세 부과 후에 예상되는 갑국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를 자유무역으로 수입하고 있던 갑국에서 단위당 $P_1 - P_0$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관세 부과 전 자동차의 국제가격은 P_0 였다. 이 나라는 국제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자동차는 국제 가격으로 이 나라에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



- ① 자동차의 국내 생산량은 Q_2 이다.
- ② 자동차의 국내 수요량은 Q_3 이다.
- ③ 정부의 관세 수입은 $P_1 \times (Q_3 - Q_2)$ 이다.
- ④ 자동차의 국내 생산량이 $Q_2 - Q_1$ 만큼 증가한다.

19. [정답] ③

[출제단원] V.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관세 부과 전	관세 부과 후
자동차의 국내 시장 가격	P_0	P_1
자동차의 국내 수요량	Q_4	Q_3
자동차의 국내 공급량(생산량)	Q_1	Q_2
자동차의 국외 공급량(수입량)	$Q_4 - Q_1$	$Q_3 - Q_2$
상품 수지 적자(=수입 가격×수입량)	$P_0 \times (Q_4 - Q_1)$	$P_0 \times (Q_3 - Q_2)$
관세 수입(=관세 부과액×수입량)	없음	$(P_1 - P_0) \times (Q_3 - Q_2)$

- ① (O) 자동차의 국내 생산량은 Q_2 입니다.
- ② (O) 자동차의 국내 수요량은 Q_3 입니다.
- ③ (X) 정부의 관세 수입은 $P_1 \times (Q_3 - Q_2)$ 가 아니라 $(P_1 - P_0) \times (Q_3 - Q_2)$ 입니다. 즉 $P_1 \times (Q_3 - Q_2)$ 의 면적 중에서 $(P_1 - P_0) \times (Q_3 - Q_2)$ 은 정부의 관세 수입이고 $P_0 \times (Q_3 - Q_2)$ 은 관세 부과 이후의 상품 수지의 적자를 의미합니다.
- ④ (O)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 부과액만큼 자동차의 시장 가격이 상승합니다. 주어진 사례에서는 $P_1 - P_0$ 만큼의 관세가 부과되어 자동차의 시장 가격이 P_0 에서 P_1 으로 상승합니다. 그런데 국내 자동차 시장의 공급 곡선은 공급 법칙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공급 법칙에 따라 공급량은 Q_1 에서 Q_2 로 $Q_2 - Q_1$ 만큼 증가합니다.

20.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이 노동 1단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필요 생산요소는 노동뿐이고, 양국이 보유한 노동의 양은 같다.)

국가 \ 재화	X재	Y재
갑국	5개	5개
을국	4개	2개

- ① 갑국은 X재 생산에, 을국은 Y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 ② 을국에서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2개이다.

③ Y재 1개를 더 생산할 때 포기해야 하는 X재는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④ 양국이 비교 우위 재화를 특화하여 무역을 할 때, 양국의 특화 상품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무역 이전보다 커진다.

20. [정답] ④

[출제단원] V.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국제 무역의 이해(비교우위)

갑국의 경우 X재 5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5개이므로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1개(=5/5)입니다. Y재 5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5개이므로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1개(=5/5)입니다. 을국의 경우 X재 4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2개이므로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1/2개(=2/4)입니다. Y재 2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4개이므로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2개(=4/2)입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갑국	Y재 1개	X재 1개
을국	Y재 1/2개	X재 2개

노동 1단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다면 그 재화의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고 합니다. 갑국은 을국에 비해 X재와 Y재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습니다. 어떤 재화를 생산할 때 생산의 기회비용이 작을수록 그 재화의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고 합니다. X재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에 비해 작으므로 을국은 X재에 비교 우위가 있고, Y재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에 비해 작으므로 갑국은 Y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 ① (X) 갑국은 Y재 생산에, 을국은 X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 ② (X) 을국에서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1/2개입니다.
- ③ (X) Y재 1개를 더 생산할 때 포기해야 하는 X재는 갑국은 1개, 을국은 2개이므로 갑국이 을국보다 작습니다.
- ④ (O) 무역 이전에 갑국의 특화 상품인 Y재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X재 1개'이고, 을국의 특화 상품인 X재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Y재 1/2개'입니다. 그런데 양국이 무역을 통해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특화상품에 비해 기회비용이 작아야 하므로 갑국은 'Y재 1개 > X재 1개'의 교역조건을 제시할 것이고, 을국은 'X재 1개 > Y재 1/2개'의 교역조건을 제시할 것입니다. 따라서 두 국가가 무역을 할 때 교역조건은 'X재 1개 < Y재 1개 < X재 2개' 또는 'Y재 1/2개 < X재 1개 < Y재 1개'로 결정될 것입니다.

이처럼 무역을 할 경우 각 국의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소비가능선이 확장됩니다. 이는 무역을 할 경우 무역 이전에 비해 특화 상품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갑국의 소비자가 이전에 Y재 1단위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X재 1단위만을 포기하면 되었는데, 무역 이후에는 Y재 1단위를 생산하면 교역을 통해 X재 1단위보다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Y재 1단위를 소비하기 위해 X재 1단위보다 더 많이 포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교역조건에 따라 무역 이후에 Y재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X재 1개보다는 크고 X재 2개보다는 작을 것이므로 무역 이전에 비해 커지고, X재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Y재 1/2개 보다는 크고 Y재 1개보다는 작을 것이므로 무역 이전에 비해 커집니다. 이를 표의 형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특화상품 1개 소비의 기회비용	
	무역 이전	무역 이후
갑국(Y재 특화)	X재 1개	X재 1개 ~ X재 2개
을국(X재 특화)	Y재 1/2개	Y재 1/2개 ~ Y재 1개